'진경준 사건' 넥슨 해명 논란 자초

"개인간 주식거래"→"부득이한 주식자금 지원"→"보험성이었다" 수차례 해명 번복하며 의혹만 키워… 넥슨 "모든 의혹 해명할 것"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불거 진 진경준 검사장과 넥슨 주식 거래 사건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넥슨이 해명을 수차례 번복하며 논란을 자초 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와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진경준 검사장이 지난해 넥슨 주식을 매각해 126여 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뒤 최근 그과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강남 부동산 매매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넥슨이 명확치 않은해명으로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25일 발표된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당시 진경준 법무부 출입 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은 156 억5609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 은 법조인에 올랐는데 이는 진 검사 장이 2005년 인기주 넥슨 비상장 주 식 1만주를 매입한 결과다.

당시 넥슨 비상장 추식은 외부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넥슨은 2011년 도 교증권거래소에 상징하며 글로벌 기업이 된다. 이 과정에서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넥슨 지주회사 NXC 대표가 진경준 검사장에게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시 넥슨은 "개인 간의 주식거래라 회사 차원에서 확인이 어렵다"는 설명을 했다.

하지만 김상헌 LG그룹 법무 부사장 (현 네이버 대표이사)이 같은 시기에 넥슨 비상장 주식을 산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넥슨 이 법조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이 과정에서 지난 4일 진경 준 검사장 등이 넥슨으로부터 4억 2500만원 회삿돈을 받아 주식 1만주를 산 거래 내역이 포착됐다.

넥슨이 진경준 검사장 등에게 회삿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사게 도와줬다 는 사실은 넥슨의 기업비리 의혹으로 확게되다.

넥슨은 해명문 형식의 사과 입장자료를 내고 "2005년 당시 퇴사한 임원이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을 외부 투자회사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고, 외부 투자회사가 주식을 매수하면 단기간 내 상장 압박 등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악영향이 염려됐다"며 "이를 대신해 회사의 가치를 공유할수 있는 장기투자자를 급하게 물색했다.이 과정에서 진 검사장 등이 매수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당시 주식 매도자가



수일 내에 주식 매매대금이 모두 입금되기를 원하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진 검사장을 포함해 주식 매수인들이모두 근시일 내에 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회사에서 빠른 거래를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게 됐다"며 "회사의 자금대여는 매수인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진행됐다. 그리고대여자금은 실제로 근시일 내에모두상환돼 당해 연도에 모든 거래가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넥슨의 해명으로 사건이 일단라된 듯 했으나 진경준 검사장은 넥슨에게 받은 4억2500만원을 제대로 갚지 않 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넥슨의 해명은 또다시 뒤집혀진다.

결국 김정주 NXC 대표는 지난 13일 오후4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 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대표로부터 "진경준 검사장과 친구 이상의 관계다" "주식 매매를 도와준 것은 보험성 차원이었 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아버졌다

넥슨 비상장 주식 사건은 고위 공직 자와 기업인의 비리 의혹으로 끝나는 듯 했으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 부지를 넥슨이 매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넥슨 주식 사건은 청와대로까지 불똥이 튄다. 넥슨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일 가의 부지를 진경준 검사장 주선으로 특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18일 공식 부인했다.

넥슨은 "당시 사옥 부지를 알아보던 중 리얼케이프로젝트 산하의 부동산 시행사를 통해 해당 부지를 소개받아 2011년 3월 매입하게 됐다"며 "해당 거래가 진경준 검사장이나 우병우 민 정수석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건물 매입 가격도 인근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평당 1억3000만원 수준이었으며, 대부분의 인력이 판교로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2년 9월 해당 부지를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넥슨의 강남 부지 매매 과정에서 석 연치 않은 의혹 등이 하나둘씩 드러 나면서 넥슨 비상장 주식 사건은 게 이트 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넥슨은 "모든 의혹에 대해 해

면서 넥슨은 모든 의혹에 대해 하명하겠다"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VR 콘텐츠 기술 개발에 40억 지원

정부가 가상현실(VR) 콘텐츠산업 육성 시업에 시동을 걸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 육성 방향'의 7대 추진 과제 중 첫 사업으로 VR 기술개발에 40억원을 지원하는 VR 콘텐츠 프런티어 프로 젝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대표 VR 콘텐츠 개발을 위해 기술개발 - 스토리 개발 - 콘텐츠 제작 - 테스트 - 국내외 유통 등 VR 콘텐츠 생애 주기의 전 단계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게임과 테마파크, 영화·영상·방송·K

팝·관광 등 시장성과 수출 가능성이 높은 5대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21일 공모에 들어가는 1단계 연구개발 지원은 최대 40억원 범위 내에서 5~8개 과제를 선정한다. 이는 VR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 VR 콘텐츠를 제작할 기업이 주관하거나 공동 연구기관으로 포함 돼야 한다. 문체부는 기술성(50%)과 사업성(50%)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 할 계획이다. /뉴시스

"대부업 최고금리 27.9%"

금감원, 불법사금융 대응 안내책자 발간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대부중개수수 료,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요령 안내' 책자를 발 간한다고 20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사금융과 관련 법정 최 고금리 하향조정과 불법 대부중개수 수료 등을 설명한다.

'대부업법' 법정최고 금리 조항의 개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연 34.9%에서 27.9%로 하향조정 됐다.

만약 법정금리보다 더 냈다면 부당 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 부업자를 상대로 대부업법 또는 이자 제한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소가 가능 하다

또 대부중개업자 등은 수수료, 사례 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중개와 관련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니 피해를 당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불법 채권추심행위 유형 및 위반시 제재 내용 등도 답았다.

불법 채권추심은 채무자를 폭행 · 협 박 · 체포 · 감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 전화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해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법적으로 금지된다.

통상 채권추심자는 수사과정에서 금 지행위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또 는 야간에 전달된 문자 메시지나 전 화에 대한 통신확인자료 등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밖에 책자에는 신용등급 상향 등을 이유로 돈을 챙기는 대출사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재산 상 손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책도 포함됐다. /뉴시스

포켓몬고 "공식마켓 통해 설치해야"

경찰 "악성코드·해킹 주의" ··· 설치 전 백신검사 필요

국내 '포켓몬 GO(고)' 이용자가 103만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들은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강원 속초, 양양등의 지역을 방문하는 등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포켓몬고는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게임이다. 현실에서 직접 이동하며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캐릭터(포켓몬)들을 잡으러 다니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식 출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 내려받기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하는 경우가 있어 해킹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은 20일 포 켓몬고와 관련한 사이버 위협요소 를 분석한 결과 ▲악성코드 유포 ▲이메일 피싱 ▲인터넷 사기 등 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이미 포켓몬고 열풍을 악용한 사이버범 죄가 등장했다.

포켓몬고 설치파일에 원격제어 가 가능한 악성코드가 삽입돼 사 용자 스마트폰에 담긴 정보가 외 부로 유출된 것이다.

이와 함께 포켓몬고가 유료로 전 환된다는 이메일을 보내 피싱사이 트로 접속을 유도, 개인정보를 빼 가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포켓몬고 설치파일과 게임의 기반이 되는 위치파악시스템(GPS) 조작 어플 등에 악성코드가십입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켓몬고를 받게 되더라도 외국 공식 어플마켓을 이용해야하며설치 전 파일에 대한 백신검사가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메일을 열어보거나 첨부과일을 내려받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경찰은 인터넷 상에서 아이템 등을 지급하는 대가로 현금 등을 가로채는 사례와 와이파이를 통한 해킹 피해에 대해 우려했다.

게임 관련 거래에 있어서는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 전국 홈페이지 등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 등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을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와이파이를 사용하 기 전에 해킹 위험 여부를 파악해 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권했다. /뉴시스

